

“16년 논란 종지부 찍고 광주다운 교통체계를”

광주시장 당선인 이것부터 해결을

〈4〉 도시철도 2호선

지난 16년간 논란이 됐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오는 7월 2일 출범을 앞둔 민선 7기 광주시정의 가장 ‘뜨거운 감자’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땅을 파고 철로를 놓는 ‘저심도 방식’에 반대하며, 지상을 달리는 소형 전철인 트램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대신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인수위 격인 광주혁신위원회 위원에 도시철도 2호선을 반대했던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면서 민선 6기 인수위 시절에 시작했던 공론화 과정을 민선 7기에 또 되풀이되는 것이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는 “지난 16년간 논쟁만 반복했다는 점에서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철도 2호선 건립 반대, 왜?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시정~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정

1호선 적자에 인구도 안 늘며 일부 시민단체 재검토 요구 트램·BRT방식 도입 주장도

市, 예산·시간허비 재검토 난색 “필요성 공감...부작용 최소화”

로 이어지는 41.9km의 순환선으로, 모두 3단계로 나눠 공사하게 된다. 1단계 완공은 2023년, 최종 완공 시점은 2025년이다. 기본설계 기준 예상 소요 사업비는 2조549억원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도시철도 1호선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광주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2호선을 건설하면 광주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들은 또, 광주의 인구와 교통 상황에 맞게 도시철도 2호선 건립 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하를 달리는 도시철도 2호선을 아예 땅 위를 오가는 트램과 BRT 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선택된

시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 등을 통해 결정을 도출하는 ‘시민배심원제’나 ‘공론화조사’를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광주시정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광주혁신위원회 ‘환경교통안전’ 분과에 이들 단체 관계자가 포진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 재공론화’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광주시 ‘난색’, 당선인 측 ‘필요성 공감, 부작용 최소화’=광주혁신위원회는 도시철도 2호선 반대 모임을 주도해 온 인사의 혁신위 참여에 대해 “도시철도 2호선 건립의 원점 검토는 아니다”며 분명한 선을 그치고 있다.

혁신위는 지난 19일 광주시정 도시철도 2호선 건립 관련 부서의 보고를 받은 뒤 20일에는 건립 반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2~3차례에 걸쳐 비공개 토론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과 BRT 방식으로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변원섭 공동대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최선의 교통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시민단체의 의견에 대해 광주시

는 지난 19일 혁신위 회의를 통해 난색을 표했다. 현재 진행중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작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차량 발주 업무를 지난 3월 잠정 중단한 상태지만, 이미 25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오는 12월 또는 내년 초 2호선 1구간 공사를 시작한다는 목표도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을 재검토할 경우 500억~1000억원의 예산이 마뭉쳐버려서 허비된다”면서 “도시철도 2호선의 사업변경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와 인허가 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최장 7년여의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혁신위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 관계자는 “도시철도 2호선을 반대해 온 단체의 대표를 혁신위 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보자는 뜻이며 도시철도 2호선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시민사회단체와의 토론과 설득을 통해 누구나 공감하는 ‘광주다운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민간공원 1단계 도시공원위 자문 착수

시민단체 회의의 참관 무산 계획 축소 차순위업체 반발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공원 개발 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절차에 착수했다.

개발 면적 및 규모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를 참관하려했지만, 시와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1단계 우선협상대상자들의 개발 계획이 당초 제안서와 달리 대폭 축소되면서 차순위업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시는 20일 “지난 15일까지 마륙·수랑·송암·봉산 등 1단계 대상 공원의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그 후속 절차로 공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변경안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 일부 위원 등이 ‘중앙·일곡·중외 등 2단계 사업 대상지에 비해 1단계 사업 대상지의 개발 면적과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격론 끝에 자문을 한 차례 더 받기로 했다.

시는 1단계의 경우 개발 면적을 공원 면적의 30% 미만으로 한 반면 2단계는 그 3분의1에도 못미치는 9.27%로 축소

했다.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들이 당초 제안했던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아파트 층수를 낮추거나 공급세대수를 줄인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여전히 우선협상대상자들이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 개발 밀도를 높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1단계 사업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도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 자체가 잘못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마륙·수랑공원의 경우 차순위업체들이 ‘제안서 내용이 비환경안전구역에 저촉된다’며 시에 이의를 신청하고 법원에 ‘사업협약 체결금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시는 이날 내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협상을 거쳐 7월 제안서 수용여부 결정, 도시관리 및 공원 조성 변경 등 행정절차 추진 등을 마칠 방침이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는 조례에서 공개하기로 돼 있는데 별다른 사유도 없이 비공개로 결정했다”며 “시가 공원을 최대한 보존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자세를 갖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해수부 장관 천일염 생산 체험 김명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전남 신안군 증도면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 ‘태평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지자체 일자리대상’ 종합대상 수상

시상금 4억원 받아

광주시가 고용노동부 주최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1위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종합대상 수상은 특·광역시 중 최

초로, 고용절벽 시대에 광주시가 추진해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새로운 모델의 정책들이 정부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은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시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 선정에 대통령상과 함께 시상금 4억원을 받았다.

서구는 최우수상, 광산구는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우수사업 분야에서 광주시의 청년잡(Job) 희망팩토리 사업과 북구의 홈케어 멀티 플랫폼사업 등 2개 사업이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광주에서 본선에 진출한 3개 자치단체와 2개 우수사업이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어촌개발사업 14곳 내년 국비 382억원 확보

전남도는 내년 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에서 14곳 국비 382억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100억원 규모의 권역단위 거점사업 4곳, 20억원 규모의 마을단위 특화사업 10곳이다. 이는 전국의 42%를 차지한다.

권역단위 거점사업은 어촌지역 중심지와 주변지역을 통합개발해 지역단위 생활·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전국 9개 가운데 장흥·장성·완도·약산·진도·쉬미항·신안·흑산·진리 등 4곳이 포함됐다.

마을단위 특화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특화산업화, 경관·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

전국 24곳 중 여수 소장, 고흥 장길·내로·연동, 보성 군학, 영광 송이도, 완도 동고·진산, 진도 오류7리, 신안 우이도 등 전남에서는 10곳이 선정됐다.

주요 추진 사업은 교육·문화·복지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 특산물 유통·가공시설을 비롯한 소득증대 지원, 테마·체험마을 개발을 통한 어촌 관광 육성 등이다.

주민들의 자립·운영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전문기와 연계한 주민 역량 강화사업도 이뤄진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국비 991억 확보

전남도는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비로 185억원, 순천 해룡 120억원, 고흥 고흥만 115억원, 광양 선소 112억원, 무안 금산 98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시·군, 농어촌공사 합동으로 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설계를 한 뒤 연말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확보한 국비는 3~5년 동안 연차적으로 투입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문인 광주 북구청장 당선인 인수위 생략 소통행정 눈길

광주시 북구가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민선 7기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북구는 “형식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선 7기 출범을 위해 구성목표 주민공모, 전문가 초청 지역 현안 공유회 등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인 북구청장 당선인은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우려가 있는 인수위원회 구성을 생략했다. 대신 현안에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9~20일 간부공무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민선 7기 현안업무 공유회’를 열어 북구의 각종 현안 및 주요정책 추진 상황, 국·시비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보육 등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및 단체의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현안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또한 오는 22일까지 구성 운영의 지표가 되는 구성목표(구호)를 공모할 예정이다. 구성 홈페이지(www.bukgu.gwangju.kr)나 이메일(jryb97@korea.kr) 또는 팩스(062-510-1473)를 통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

밝은'광주안과'의 새 이름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년 1.75% 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땅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 원금, 이자 빼고 8~10% 가능

땅만 빌려주실 분 ▶ 20년후 기부채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햇빛 농사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